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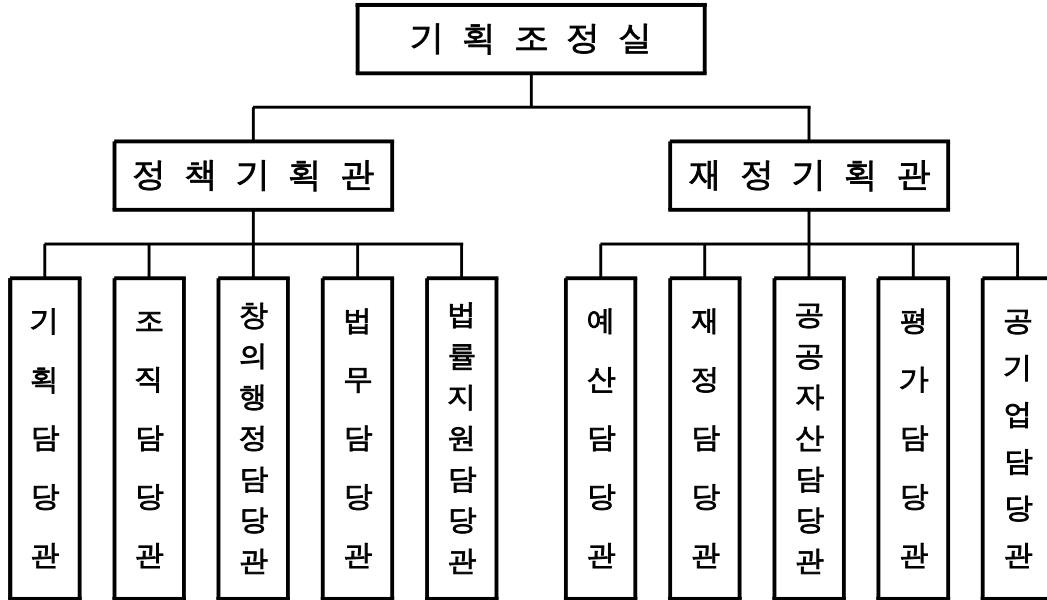
주요 업무보고

2023. 4.

기획조정실

I. 일반 현황

조 직 1실, 2관, 10담당관, 49팀, 1직속기관 · 2출연기관



- 직속기관 : 시립대학교(6처 8대학 10대학원)
- 출연기관 : 서울연구원(1본부 1단 4실 4센터), 서울기술연구원(1본부 7실)

인 력 292명/279명(정원/현원)

(’23. 3. 31. 기준)

구 분	합 계	일반직	임기제	관리운영직
계	292 / 279 (164)	253 / 246	33 / 27	6 / 6
기 획 담 당 관	42 / 40 (18)	34 / 36	6 / 4	2 / -
조 직 담 당 관	32 / 31 (16)	31 / 29	- / -	1 / 2
창 의 행 정 담 당 관	22 / 22 (13)	22 / 20	- / 1	- / 1
법 무 담 당 관	26 / 27 (17)	23 / 24	2 / 2	1 / 1
법 률 지 원 담 당 관	32 / 28 (17)	14 / 12	18 / 15	- / 1
예 산 담 당 관	40 / 40 (30)	38 / 38	1 / 1	1 / 1
재 정 담 당 관	32 / 30 (17)	31 / 29	1 / 1	- / -
공 공 자 산 담 당 관	12 / 11 (3)	9 / 9	3 / 2	- / -
평 가 담 당 관	33 / 30 (19)	32 / 30	- / -	1 / -
공 기 업 담 당 관	21 / 20 (14)	19 / 19	2 / 1	- / -

※ 괄호 안은 여성공무원수

주요기능

구 분	담 당 업 무
기 획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업무계획 수립, 시정 현안사항 기획·조정 ○ 시의회 관련 업무, 국정감사 수감 총괄, 공약 총괄 관리 ○ 시정백서·현황 작성, 정책과제 개발 및 자문에 관한 사항 등
조 직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및 정원관리, 조직진단에 관한 사항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및 지방분권 업무 총괄 조정 ○ 사무이양·위임, 사무위임전결 관련 사항 등
창의행정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행정 기획, 과제 발굴, 확산에 관한 사항 ○ 시정연구, 시립대 운영 지도·지원, 연구원 지도·감독 ○ 학술용역, 인구변화 대응 및 도시경쟁력 지수 관리
법 무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정비, 납세자 보호업무 ○ 자치법규 입안 심사 및 정비,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운영
법률지원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소송 수행, 법률자문, 계약서 및 위·수탁 협약서 심사 ○ 대시민 법률상담, 공익변호사단 운영 등
예 산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총괄, 예산집행 관리 총괄 ○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승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재 정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市·산하기관 통합재정관리, 기금운용 총괄 ○ 재정투자심사, 지방보조금·국고보조금 총괄 등
공공자산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토지자원의 활용성 검토 및 활용계획 수립 ○ 공유재산 위탁개발 및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운영
평 가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 주요사업·시책 성과평가 및 조정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 주요 시책 공정관리 등
공기업 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기업·출연기관 설립·지원, 경영평가, 재정 모니터링 ○ 공기업·출연기관 경영혁신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등

예산 총 4조 5,681억원(본예산 기준)

○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기준일 : '23.3.31.)

구분	2022년 (사업수)	2023년 (사업수)	증감
합계	3,008,447 (47)	4,568,060 (47)	1,559,613
일반회계	666,281 (45)	725,339 (47)	59,058
특별회계	243,529 (2)	263,060 (-)	19,531
기금	2,098,637 (-)	3,579,661 (-)	1,481,024

○ 일반회계 : 총 7,253억원

(단위 : 백만원 / 기준일 : '23.3.31.)

구분	2022년 (사업수)	2023년 (사업수)	증감
합계	666,281 (45)	725,339 (47)	59,058
기획담당관	1,235 (4)	1,005 (4)	-230
조직담당관	1,265 (3)	1,765 (3)	500
창의행정담당관	127,914 (9)	92,726 (10)	-35,188
법무담당관	697 (3)	699 (3)	2
법률지원담당관	7,766 (2)	7,137 (2)	-629
예산담당관	289,322 (3)	274,831 (3)	-14,491
재정담당관	235,156 (13)	342,895 (9)	107,739
공공자산담당관	- (-)	1,202 (5)	1,202
평가담당관	2,131 (4)	2,142 (4)	11
공기업담당관	795 (4)	937 (4)	142

○ 특별회계 : 총 2,631억원

(단위 : 백만원 / 기준일 : '23.3.31.)

구분	2022년 (사업수)	2023년 (사업수)	증감
예산담당관	243,279 (-)	263,060 (-)	19,781
공공자산담당관	250 (2)	- (-)	-250

○ 기금 : 총 3조 5,797억원

(단위 : 백만원 / 기준일 : '23.3.31.)

구분	2022년 (사업수)	2023년 (사업수)	증감
합계	2,098,637 (0)	3,579,661 (0)	1,481,024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1,587,096 (-)	1,758,938 (-)	171,842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511,541 (-)	1,820,723 (-)	1,309,182

※ 사업수는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 등 제외

II. 정책 목표

시민의 삶을 회복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

체계적 정책조정 및 시정성과 창출 기반조성

① 시민이 체감하는 창의적·효율적 시정 운영

② 시민권의 향상을 위한 제도 운영 내실화

③ 효율적인 예산·재정 관리체계 확립

④ 출자·출연기관 효율화 및 도시경쟁력 제고

III. 기획조정실 주요 업무보고

1. 시민이 체감하는 창의적·효율적 시정 운영

- ① 창의행정 지속추진으로 시민체감 행정서비스 개선
- ② 조직 내 학습활동 활성화 지원
- ③ 市 위원회 효율적 정비 및 운영 개선

2.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 운영 내실화

- ① 신속·공정한 행정심판으로 실질적 시민 권익구제 강화
- ② 무료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법률복지 증진
- ③ 체계적 송무수행과 법률지원을 통해 법치행정 구현

3. 효율적인 예산·재정 관리체계 확립

- ① 시민의 실질적 참여를 위한 시민참여 예산제 내실화
- ②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를 통한 재정환류 강화
- ③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추진

4. 출자·출연기관 효율화 및 도시경쟁력 제고

- ①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
- ② 미래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속가능발전 추진

1. 시민이 체감하는 창의적 · 효율적 시정 운영

① 창의행정 지속 추진으로 시민 체감 행정서비스 개선

② 조직 내 학습활동 활성화 지원

③ 市 위원회 효율적 정비 및 운영 개선

1 창의행정 지속 추진으로 시민 체감 행정서비스 개선

적극적 시도와 새로운 시각으로 맡은 바 직무를 다하는 창의행정으로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시정발전에 기여

□ 추진배경

- 직원 일 덜어주기, 쉬운 일처리 방법 공유로 창의행정 동력확보
- '시민 눈높이' 창의 아이디어 지속 발굴로 시민체감 행정서비스 개선

□ 추진경과

- 불필요한 일버리기 대상 발굴, 42건 폐지 확정 ('23.1월~3월)
 - 총 112건 접수, 일버리기 TF 등 거쳐 확정 (폐지42, 보류25, 제외45)
- 시민불편 해소 집중점검 우수사례 14건 선정 ('23.2월~3월)
 - 총 113건 접수, 내부 검토 및 시장단 평가 선정(최우수1, 우수4, 장려9)

□ 추진내용

① 통용 업무매뉴얼 마련

- 한눈에 보는 업무매뉴얼 제작·게시, 매월 업데이트 (창의발전소)
 -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기존 매뉴얼(112개)을 유형별·기능별로 정리
- 직원 수요 등을 반영한 통용 업무 매뉴얼 단계적 제작 및 배포
 - 매뉴얼 제1호(행사) 행사 유형별 절차 및 우수사례(19건) 제시
 - 매뉴얼 제2호(일반용역) 직원 선호도 결과 반영, 5월 중 제작·배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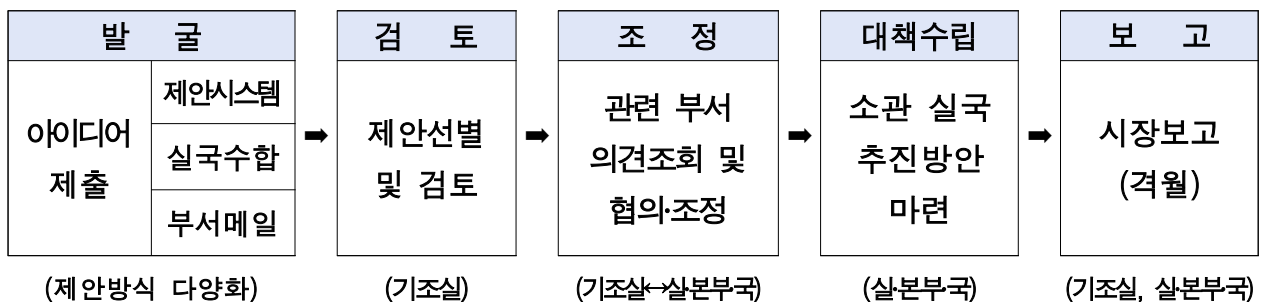
구분	일반용역	기획보고서	심사회의	예산사업설명서	자문회의	검토보고서
선호도 (608명)	27% (302명)	13% (150명)	12% (138명)	10% (108명)	7% (81명)	7% (77명)

※ (일반용역) 사업운영, 시설운영·관리, 조사·통계, 행정업무 대행 등

② 市직원 대상 창의제안 지속 발굴

- (제안방식) 직원 제안 제출방식 다양화로 더 많은 아이디어 발굴
 - 제안시스템 : 업무개선 직원 제안 수시 접수 중 (332건, 2.14.~4.14.)
 - 실·본부·국 수합 : 실국별 중점 개선·신사업 제안 수합 제출
 - 창의행정담당관 메일 계정 : 개별 제안 및 비공개 제안
- (제안분야) 상시적으로 자율주제 제안·관리, 계기성 지정주제 공모
 - 자율주제 : 자기업무와 관계없이 다양한 정책 제안 ⇒ 제안 선별·검토*
 - ① 시민불편 해소 ② 새로운 정책 제안 ③ 불필요한 일 버리기
 - * 제안자와 업무 담당자(실행 부서)가 다른 경우 충분한 협업 유도·지원
 - 지정주제 : 정책 입안 시기별 맞춤형 창의제안(4월 주제 : 인구변화 대응)
- (선정시기) 격월 우수사례 선정·시상으로 창의제안 활성화
 - 정책 제안 아이디어 중 우수사례 10건 내외 선정, 제안자 금전 보상

< 아이디어 발굴 추진절차 >



□ 향후일정

- 직원 제안시스템(창의발전소) 개선 운영 : '23. 4월~
- 직원 수요 반영 통용 업무매뉴얼 제작·배포 : 수시
- 창의제안 우수 아이디어 선정 보고회 개최 : 격월

※ 세부 추진방안은 시의회 협의, 예산확보 등을 거쳐 확정

① 더욱 편리한 지하철 이용환경 구축 ('23. 하반기) 최우수

(1) 지하철 하차 후 반대방향 재탑승 시 요금 면제

현황 지하철 반대방향 재탑승시 동일역 5분 내에는 무료 재승차 가능하지만, 도착역을 지나친 경우 다시 요금 지불 후 반대편 승강장 이동 가능하여 다수 민원 발생

개선 어느 역에서든 하차 후 동일역 기준시간 내(예)10분 이내) 재승차 시 기본 요금을 면제하고 환승 처리

(2) 지하철 열차 내 도착역 정보제공 방식개선

현황 전동차 내부 안내 표시기의 도착역 정보 노출시간 부족 및 스크린도어 뒷면 역명 스티커 시인성 부족으로 도착역 알기 어려운 문제 발생

개선 열차 내 안내표시기의 도착역 정보 노출면적·시간·빈도 등 확대와 도착역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스크린도어 뒷면에 역명 스티커 부착

② 고질적 상습정체·사고위험 도로 개선 ('23. 6월~) 우수

현황 공사장 주변, 좁은 도로폭, 불합리한 도로구조, 복잡한 차량경로 등으로 상습정체 발생하여 시민불편 지속

개선 주거밀집지, 엇갈림 상시 발생 IC 및 주요교차로 등 상습정체 발생지역에 시민 의견수렴으로 대상지 선정, 단기간에 개선 가능한 곳부터 개선 시작

③ 어르신과 동행 ‘세금 고지서’ 디자인 혁신 추진 (’23. 6월~) 우수

현황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현행의 작고 복잡한 고지서 내용 불편 호소
전체 종이 고지서의 43.3% 60세 이상, 29.7% 65세 이상 고령자

개선 전체 납세자 대상 큰 글씨 세금 고지서 제작 발송

※ 글자 크기 확대(8→15P), 표준서체(서울서체) 적용 등

④ 경찰청 유실물 포털 연계로, 공원유실물 쉽게 찾아요 (’23. 5월~) 우수

현황 공원 분실물을 찾을 때, 경찰서와 공원관리소 각각 연락 및 방문 필요,
수기대장 작성 및 전용 보관센터 부재로 체계적 관리 어려움

개선 관할경찰서에 ‘전국 유실물 처리 참여기관’ 신청,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서비스(LOST112) 연계하여 경찰청 유실물 업무절차에 따라 유실물 관리

⑤ 매년 반복되는 뽕뽕이 설치 노역은 그만! (’23. 7월~) 우수

현황 어르신과 장애인 등의 경우 매년 반복되는 뽕뽕이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량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으로 환경에도 악영향

개선 기존 창호 위에 가시성 높고 단열효과가 큰 반영구 덧유리를 부착하여
냉난방비 절감, 설치 대상 발굴 및 시공을 위해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가칭)에너지 서울 동행단 구성 및 운영

⑥ 복잡한 환불 절차 간소화로 소비자권익개선 (’23. 3월~) 장려

현황 온라인 구매 신용카드 결제 건 환불신청 시 각 카드 회사마다 요구하는
증빙자료가 회사별로 상이하며 과다 요청(최대 5개 항목)

개선 각 카드사·결제대행사 증빙자료 통일 및 간소화 협의로 카드사에서 승인
번호(카드번호) 확인만으로 환불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⑦ 혼잡 중앙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개선 ('23. 10월~) 장려

현황 출퇴근 시간대 중앙 버스정류소가 혼잡하여 횡단보도 방향으로 인파가 집중되고 무단횡단도 빈번히 발생하는 등 시민불편 발생과 안전 우려

개선 중앙정류소 뒤쪽에 횡단보도(전폭 또는 반폭) 추가 설치하여 혼잡도 완화
※ 혼잡 중앙정류소 1~2개 선정하여 시범사업 후 확대 예정

⑧ 전화 레터링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불편 해소 ('23. 4월~) 장려

현황 수도사업소 내선번호로 시민 통화 연결 시, 보이스피싱, 여론조사 등으로 오인하여 차단되어 수도요금 관련 중요 정보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 발생
※ 발신전화 접속 성공률은 50% 미만

개선 전화 레터링 서비스*를 통한 선제적 정보제공으로 시민 불편 해소
※ 상대방이 모르는 번호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상호명 등 노출

⑨ 이용률 저조 市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하향 조정 ('23. 5월~) 장려

현황 시 공영주차장 요금이 민영 주차장 요금보다 비싸 시민불편 민원 발생, 일평균 이용률 55%에 불과하여 시 세입 감소에도 영향

개선 주차면수 대비 이용률 낮은(50% 미만) 주차장 선정, 인근 민영주차장과 유사 또는 소폭 저렴한 수준으로 월정기권(전일) 요금 50% 내외 하향

⑩ 서울형 입원생활비(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 개선 ('24.~) 장려

현황 소득·재산조사(구청 통합조사팀 경유)를 통한 지원대상 선별에 30일 이상 장기간 소요(업무량에 따라 자치구별 처리 기간 편차 발생)

개선 건강보험료에 의한 소득판정으로 선정 방법과 절차 간소화

⑪ 패키지(package)형 집수리 지원 및 사후관리 ('23. 4월~) 장려

현황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관련 유사사업이 실국.부서별로 산재되어 있으며, 홍보 채널도 분산되어 있어 시민이 자신에게 적합한 사업을 찾기 어려움

개선 각종 집수리 사업의 홍보(안내)를 통합 홈페이지에서 진행하고 지원 받은 주택은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체계적 이력 관리

⑫ 신산업 스타트업 지원 바우처 방식 도입 ('23. 하반기) 장려

현황 市 클러스터 및 창업 지원시설의 지속적 확대에도 전체 스타트업 대비 지원받는 기업은 여전히 소수에 불과

개선 클러스터 입주기업 모집 시 차순위 기업군에 바우처 제공, 바우처는 민간 공간 임차 및 비즈니스 지원 민간 전문 서비스 이용 용도로 사용

⑬ 주거상향사업 입주자 계약절차 간소화 ('23. 7월~) 장려

현황 주거상향 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확정된 신규입주 임대차 계약 체결은 SH본사(강남)에서만 시행함에 따라 주거 취약계층(노약자 등)의 이동시간, 교통비 등 불편함이 따름

개선 임대차 계약 체결을 SH공사 포함, 자치구별 1개씩 운영 중인 25개 주거 안심종합센터로 확대

⑭ 남산공원 관광 맞춤형 단거리 순환버스 운영 ('23. 상반기) 장려

현황 남산공원 내 관광버스 진입이 차단('21.8.~)되어 단체관광객의 남산정상 방문 어려우며, 남산정상 경유하는 순환버스는 대부분 만차

개선 관광수요가 집중되는 주말에 단거리 순환노선 신설·운영 검토

2 조직 내 학습활동 활성화 지원

조직 내 학습활동을 지원하여 공무원의 집단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학습·연구 분위기 조성하여 행정서비스 개선 역량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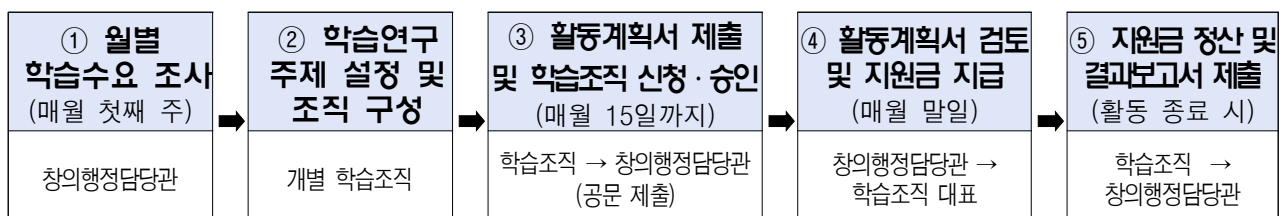
□ 추진방향

- 소규모 학습조직 활성화 및 실질적 학습활동 중심의 지원 확대
- 공무원 직접수행 학습용역의 전문성 강화 및 연구참여 부담 경감,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하여 참여 활성화

□ 추진내용

① 학습조직 지원

- 운영요건 : 아이디어 개발·보완 및 직무능력 향상과 관련된 주제로 5인 이상의 학습조직 구성
- 운영시기 : 월별 학습수요 조사 시 구성 및 지원 신청
- 지원내용 : 전문가 자문비 및 외부 세미나 참가비, 소규모 회의를 위한 공간 임차료·다과비 등 조직별 최대 연간 200만원까지 지원
 - ※ 기본운영비(~20%), 자문비용(~30%) 등 지원금 상한 비율 지정해 실질적 학습활동 지원 강화
- 지원방법 : 월별 조직 구성·신청 시 제출한 활동계획서 검토 후 지원금 신청금액 사전 일괄 지급, 활동기간 종료 후 정산
- 지원절차



- 소요예산 : 72,000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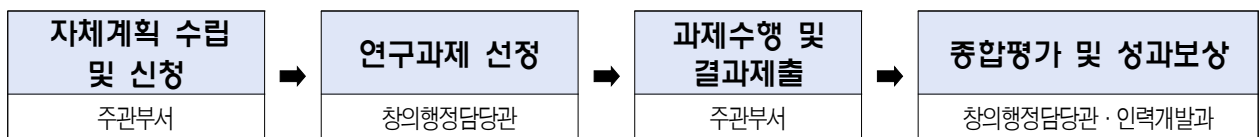
②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운영

○ 대상과제

- 기본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분석, 사례조사
- 자료조사·분석을 통한 법령·제도 개선, 신규 정책개발 및 정책보완 등

○ 지원내용 : 과제별 최대 1,000만원 연구비 지원, 참여자 전원 학습시간 25시간 부여, 우수 연구과제에 대해 시장표창(사업 으뜸이) 수여

○ 추진절차



○ '23년 주요 개선내용

구 분	현 행(As-Is)	개 선(To-Be)
구성요건 완화	총 4명 이내	총 5명 이내 원칙 ※ 과제 규모·내용에 따라 확대 가능
연구유형 다양화	논문, 보고서	논문, 리포트, 기본계획, 매뉴얼 등
연구기간 확대	창의행정담당관에서 연구종료일 지정 (11월 중순까지 연구종료)	연구시작일 ~ 당해연도 내에 주관부서에서 자율설정
예산성과금 지급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 예산성과금 대상 추천
연구보고서 완성도 제고 지원	-	(연구원) 해당분야 전문가 1:1 매칭 → 수시자문 지원

○ 소요예산 : 124,940천원

□ 향후일정

[학습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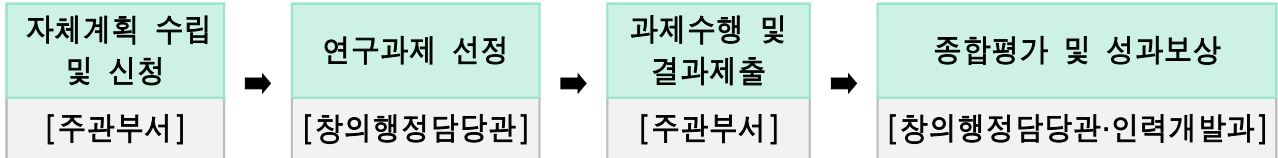
- 학습조직 신청·승인 및 지원금 지급 : '23. 4~11월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 수시 과제선정심의회 개최 : '23. 4월 중순
- 연구 수행 및 전문가 매칭 : '23. 5월(연구계약 체결일) ~

□ **근 거** : 서울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추진절차**



□ **대상과제**

-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분석, 사례조사
- 자료조사·분석을 통한 법령·제도 개선
- 신규 정책개발 및 기존 정책에 대한 보완을 위한 논리 개발
- 매뉴얼, 지침, 가이드라인 작성
- 공무원의 행정경험과 외부전문가 자문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연구과제

□ **지원내용**

- 연구비
 - (사무관리비+국내여비+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과제별 최대 1,000만원/500만원 지원
 - (국외업무여비) 필요시 1인당 300만원 내외(최대 2명) 추가 지원
- 연구원(서울연구원, 서울기술연구원) 연계 지원
 - 연구과제와 연구원 해당 분야 전문가 1:1 매칭 후 수시 자문 지원
 - 보고서 작성 교육(자료) 제공

□ **성과보상**

- 학습시간 : 참여자 전원 개인별 학습시간 25시간 부여
- 표창수여 : 평가결과 우수 연구과제에 대해 시장표창(사업 으뜸이) 수여
- 예산성과금 : 예산 절감효과가 탁월한 경우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으로 포함
 - 최종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선정 및 금액은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예 산 액 : 총 124,940천원**

※ 사무관리비 84,405천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695천원, 국내여비 3,840천원, 국외업무여비 30,000천원

□ 2022년 : 총 10건 64,646천원(과제당 6,465천원 내외)

연번	연구과제명	주관부서	연구비(천원)
1	서울시 공무원 교육훈련('23~'27) 기본계획	인력개발과	10,000
2	건축물 피난, 방화 관련 법령 분석을 통한 체계적 인허가 관리방안 연구	건축기획과	6,297
3	서울특별시 소방안전지수 개발 및 검증	소방행정과	6,600
4	흡막이가시설 굴착단계별 관리지침 개발에 관한 연구	안전관리과	4,618
5	신분당선 개통과 연계한 강남지역 광역버스 노선체계 정비방안 연구	교통운영과	6,468
6	1·2인 가구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오피스텔 관리·운영 개선방안 연구	주택정책지원센터	6,368
7	서울시 사물인터넷 통신망 및 서비스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정보통신보안담당관	5,652
8	융복합 시대, 용도지역제 변화에 대응하는 사전협상제도 개선방안 연구	공공개발기획단	7,840
9	임대차 신고제 개선을 통한 임차인 권익 보호에 관한 연구	주택정책지원센터	4,352
10	자치구 도시건축 관련 위원회 운영 사례조사를 통한 심의 기준 개선 및 권한위임 확대방안 연구	도시계획상임기획과	6,451

□ **2021년 : 총 7건 44,289천원**(과제당 6,327천원 내외)

연번	연구과제명	주관부서	사업비(천원)
1	커넥티드카 수집 정보를 활용한 과학적 교통안전정책 개발 연구	교통운영과	6,710
2	도심지 내 사면관리 유형 재구조화를 통한 소관부서 중복관리 배제 및 관리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산지방재과	6,400
3	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법령위임 조례의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기획경제전문위원실	6,760
4	행정입법의 지방자치권 침해 사례 및 개선 방안 연구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 사무를 중심으로	행정자치전문위원실	6,760
5	서울시 부동산 공시가격 반영비율 연구	세제과	4,902
6	건축사징계위원회 결과분석을 통한 중·소규모 건축물 위법 건축 방지방안 연구	건축기획과	6,448
7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실행력 제고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등 연계 수립 방안 연구	도시계획상임기획과	6,309

□ **2020년 : 총 8건 56,368천원**(과제당 7,046천원 내외)

연번	연구과제명	사업부서	연구비(천원)
1	사전협상제도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여기준 적정 적용방안 연구	공공개발기획단	5,200
2	감염병 대비 종합의료시설 확충 및 고도화를 위한 도시계획 지원방안 연구	시설계획과	6,478
3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고려한 설계 및 시공 지침 수립 연구	도로시설과	6,888
4	신축이음 누수로 인한 코핑부 열화 유지관리 방안 연구	교량안전과	13,500
5	도시철도역 개통후 추가·보완설치된 안내사인 분석을 통한 안내사인 설계 개선 연구	도시철도건축부	6,242
6	광역버스-서울교통의 효율적 환승·연계방안 및 기대효과 분석	교통운영과	5,000
7	기후 및 정책변화 대응을 위한 도심형 산사태 위험등급 판정 개선방안 연구	산지방재과	6,440
8	기관평가에 협치역량평가 도입 추진에 따른 평가체계 보완·발전 방안 연구	갈등관리협치과	6,620

3

市 위원회 효율적 정비 및 운영 개선

낮은 개최실적 등 비효율적 위원회를 정비하고 운영 제도 개선으로 市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여 시정 효율화 기여

□ 위원회 현황('22년말 기준)

- (위원회 및 참여위원 수) 254개 / 4,645명
 - (위원회) 254개로 최근 10년간 지속적 증가 ('13년 136개 → '22년 254개)
 - (참여위원) 4,645명 중 당연·임명직 700명, 위촉직 3,945명
- (회의횟수) 연간 총 1,994회, 위원회별 평균 개최 횟수 7.8회
 - '22년 기준 1회 이하 회의 개최 위원회는 76개로 전체의 30.0% 차지

□ 개선방향

- (정비) 운영실적 저조 등 비효율적 위원회 대폭 정비
- (신설억제) 상설위원회 신설 억제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운영활성화) 위원 출석률 제고 등 위원회 활성화 방안 추진

□ 개선방안

① 비효율적 위원회 정비

- 정비방향 : 개최실적, 필요성 등을 종합검토하여 비상설, 폐지, 통합 추진

- (비상설) 목적·기능상 운영 필요하지만 회의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 '22년 1회 이하(76개) 또는 최근 3년 평균 1회 이하(4개) 개최 위원회 등을 대상

- (폐지) 설치목적 달성, 행정여건 변화 등으로 운영필요성이 저하된 위원회
- (통합) 다른 위원회와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 **정비대상 : 총 65개** (254개 위원회의 25.5%)
 - (정비유형) 비상설 27개, 폐지 8개, 통합 30개(38개→8개)
 - (정비방법) 조례개정 55개, 법령개정건의 10개

구 분	총 계	비상설	폐 지	통 합
총 계	65	27	8	30(38→8개)
조 례 개 정	55	17	8	30
법령개정건의	10	10	-	-

② 위원회 신설 억제

- (위원회 설치) **설치 요건 엄격화 및 비상설 운영 원칙 마련**
 - ‘기존 위원회의 분과로 운영가능한 경우’ 등의 경우에 위원회 신설 엄격 제한
 - 위원회 신설 필요시 비상설 운영 원칙 신설, 예외적인 사유에만 상설로 운영
- (존속기한 연장협의) **존속기한 종료전, 조직담당관의 승인 절차 마련**
 - 존속기한 연장여부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 검토 절차 마련

③ 위원회 운영활성화

- (출석을 관리 강화) **당연·임명직 및 위촉직 출석을 제고 방안 제도화**
 - 개별 위원회 조례에 위원 출석률이 저조할 경우 해촉 가능 규정 신설하고 내부공무원 위원 직급 현실화하도록 조례개정 권고
- (위원회관리시스템 구축) **위원출석률 등을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 관리**
 - 회의개최시마다 출석률 등 위원회 현황 정보를 입력·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 향후일정

- 정비대상 위원회 조례개정 추진 : '23. 4월~
- 위원회 관리시스템 구축 : '23. 4월~10월

□ 정비대상 : 총 65개 (비상설 27개, 폐지 8개, 통합 30개(38개 →8개))

구분		위원회명		
비상설 (27)	조례개정 (17)	창업정책위원회,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심의위원회, DMC기획위원회, 서울마이시스산업육성위원회,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재활용사업자육성자금융자심사위원회, 사회성과보상사업심의위원회,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서울형유급병가지원자문위원회, 소비자정책위원회,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찾아가는동주민센터운영위원회,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사회주택위원회, 평생교육협의회,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지역상생발전위원회		
	법령건의 (10)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지적재조사위원회, 전통사찰보존위원회, 구조구급정책협의회, 공동구협의회, 산지관리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폐지 (8)	조례개정	희망경제위원회, 청계천시민위원회, 물순환시민위원회,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서울사수소산업육성위원회, 에너지정책위원회, 시민행복위원회, 시민청운영자문위원회		
통합 (38→8)	조례개정	· 인권	3 → 1	·인권위원회,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어린이청소년인권위원회 → 인권위원회로 통합
		· 버스	2 → 1	·버스정책시민위원회, 마을버스정책심의위원회 → 버스정책시민위원회로 통합
		· 급식	2 → 1	·공공급식위원회,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 공공급식위원회로 통합
		· 성평등	3 → 1	·성평등위원회, 성별임금격차위원회, 성인지예산제운영협의회 → 성평등위원회로 통합
		· 노동자권익	3 → 1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위원회,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 →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로 통합
		· 미래사회연구	2 → 1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인구변화대응위원회 →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통합
		· 기업	2 → 1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유망중소기업인증 정책위원회 → 기업지원위원회(명칭변경, 가칭) 통합
		· 기금	21 → 1	·21개 개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서울시 기금총괄심의위원회(명칭변경, 가칭)로 통합

2. 시민권의 향상을 위한 제도 운영 내실화

① 신속·공정한 행정심판으로 실질적 시민 권익구제 강화

②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법률복지 증진

③ 체계적 송무수행과 법률지원을 통해 법치행정 구현

1

신속·공정한 행정심판으로 실질적 시민 권익구제 강화

시민지향적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을 통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침해된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성 제고

□ 사업개요

- 심판위원 : 정원 50명/현원 40명(외부 35명, 내부 5명)

행정심판 운영 실적 (’23.3.31.기준, 단위 : 건)	접수건수	재결건수			
		소계	인용	기각	각하
	338	187	38(21%)	109(58%)	40(21%)

□ 추진내용

-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행정심판 주요사례 공개(’23. 3월~)**
 - 위원회 재결시마다 주요사례(3건 이상) 온라인행정심판 사이트에 등재
 - ※ (기존) 연1회 재결레집 제작·배포 → (변경) 온라인행정심판 사이트에 주요 재결 사례 등재
-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구제 확대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
 - 인지도 확대를 위해 구 민원실·주민센터 등 주민 접점장소 중심 홍보
 - ※ 국선대리인 현황(선임/신청) : 18건/19건(’22년) → 5건/5건(100%)(’23.3.31.)
- **행정심판 청구의 신속·공정한 처리를 위한 행정심판 운영**
 - 사건 진행상황 점검 및 체계적인 관리로 위원회 신속 상정 추진
 - 신중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구술심리 및 주·부심 지정 사건 확대
 - ※ 주부심 지정/총 재결 : 555건/983건(56%)(’21) → 409건/716건(57%)(’22) → 108건/187건(58%)(’23.3.31.)
 - ※ 구술심리 : 5%(’21) → 8%(’22) → 7%(’23.3.31.)
 -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의 임기만료에 대비한 신규 위원 위촉
 - ※ 임기만료(’23.3월 4명)에 따른 신규 위원 3명 위촉 완료, 1명 위촉 예정

□ 향후일정

-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규칙 개정 추진 : ’23. 4월~

2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법률복지 증진

고품질의 무료 법률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실질적 권익 향상을 도모

□ 추진방향

- 시민들의 수요에 맞는 편리한 무료 법률상담 제공
- 법률서비스 인적 기반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제도 실효성 제고

□ 추진내용

- 마을법무사 참여 자치구 확대 등을 통한 법률서비스 접근성 확대
 - 수요 조사(1~3월, 2회)를 통해 그동안 참여하지 않았던 중구도 사업에 참여하여 市 25개 전 자치구에서 마을법무사 사업 운영 예정
 - ※ 총 8개 자치구(중구 포함, 24개동)에 마을법무사 28명 추가 배치 예정('23.6월)
- 공익변호사 풀(pool) 적정성 확보를 위한 철저한 인력 관리
 - 공익변호사단의 일정 규모 유지(약 1,000여명)로 안정적 인적 기반 확보
 - 법률상담 품질 향상을 위해 불성실·불친절 민원이 제기된 변호사에게 조치 방안* 및 절차 등을 마련하여 제재
 - * 사실관계 파악 후 정당한 민원일 경우 민원 제기 횟수에 따라 조치
 - 공익변호사 재위촉 기준에 공익활동 실적과 민원 유발 등을 추가하여 공익활동 참여율 제고 및 법률상담의 책임성 확보
- 방문상담 원칙 및 전화상담 병행으로 무료 법률서비스 편의 제고
 - 코로나19 일상 회복 기조에 따라 동주민센터 방문, 대면 상담을 원칙, 동주민센터별 수요를 고려하여 전화상담 병행 운영

□ 향후일정

- 마을변호사·법무사 신규 위촉 및 재위촉 : '23. 4~5월
- 마을법무사 추가 배정 실시 : '23. 6월

3 체계적 소송수행과 법률지원을 통해 법치행정 구현

사업 수행 전단계에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법률서비스를 지원하여 시정 운영 전반의 신뢰성 확보 및 법률 적합성 제고

□ 추진방향

- 체계적·전문적인 소송수행 관리로 효과적인 법률지원체계 구축
- 전문인력을 활용한 선제적 법률 자문 및 계약 심사로 분쟁 예방

□ 추진내용

- 소송업무의 통합 수행으로 전문성 강화 및 체계적 관리
 - 추진실적('23. 3월 기준) : 총 971건 소송수행(117건 종결), 승소율 84%

구 분	총 수 행 건 수			판 결 확 정				진 행
	계	이 월	신 소	계	승 소 (승소율 %)	패 소	기타	
2023. 3월	971	833	138	117	63 (84.0)	12	42	854
2022	1,328	860	468	543	362 (80.3)	89	92	785
2021	1,273	699	574	413	292 (75.5)	95	26	860

- 정책수립 단계부터 법률 자문으로 적법성 제고
 - 도시계획시설 지정, 민간위탁, 인허가, 보조사업 등 시정현안 법률자문
 - ※ 지원 실적 : '23. 1~3월 총 321건(내부자문 203, 외부자문 118)
- 주요 사업의 사전 계약심사를 통해 시 재정건전성 강화
 - 협상 단계에서부터 계약과 협약에 대한 행정·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적 및 재무적 사전 검토 수행
 - ※ 심사 실적: '23. 1~3월 총 79건(민간위탁 23, 공유재산 및 임대차 등 56)

□ 향후일정

- 시정 현안의 효율적 추진 및 대응을 위한 법률지원 : 연중 상시

3. 효율적인 예산·재정 관리체계 확립

① 시민의 실질적 참여를 위한 시민참여예산제 내실화

②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를 통한 재정환류 강화

③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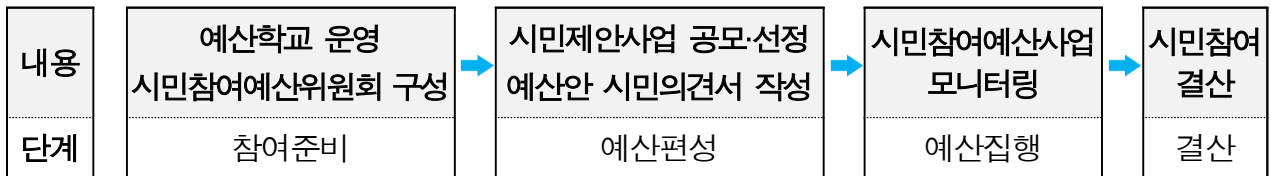
1

시민의 실질적 참여를 위한 시민참여 예산제 내실화

시민참여예산제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시민 이해 및 실질적인 참여를 증진함으로써 시민이 공감하는 재정 운영 추진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추진목적 : 예산과정의 시민 참여 확대 및 재정 운영의 투명성 향상에 기여
- 추진내용 및 절차



□ 추진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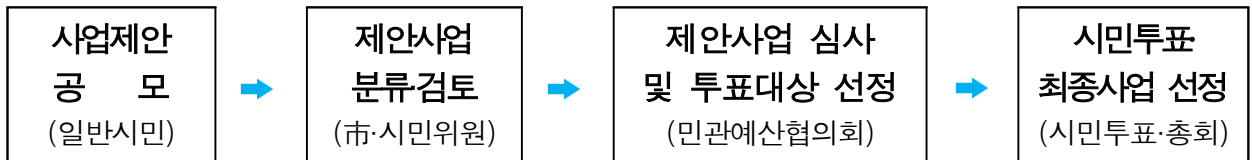
- **시민참여예산 교육을 위한 예산학교 운영**
 - 市 평생학습포털 내 온라인 강의 개설·운영('23. 3월부터 상시)
 - 市 예산 및 시민참여예산제도 현황, 참여예산사업 제안방법 등 교육
 - ※ 운영실적(3.31. 기준) : 참여인원 239명 중 166명 수료 (수료율 69.5%)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120명(임기 : '23. 4월 ~ '24. 1월)
 - 구성방법 : 예산학교 회원('12년~'23년 4,679명 수료) 대상 모집공고 후 추첨
 - ▶ 성별·연령별·지역별 균형을 고려한 무작위 공개추첨('23. 4. 5. / 경쟁률 6.9:1)
 - ▶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선발(약 17%) : 청소년(6명), 장애인(10명), 이주민·다문화가정(4명)
- **시민 제안사업 공모 진행**('24년 운영규모 : 500억원)
 - 공모기간 : 54일(3. 6. ~ 4. 28.) ※ '22년 : 17일(7. 18. ~ 8. 3.)
 - 공모분야 : 시정 전 분야 ※ '22년 : 교통·건강·환경 관련 3개 주제

□ 추진계획

① 예산과정별 시민참여 활성화

○ 제안사업 심사 및 선정, 예산편성 : '23. 5월~12월

- (제안사업 분류·검토) 실·본부·국 사업 분류 및 적격 여부 등 부서 검토
- (제안사업 심사·투표대상 선정) 분야별 민관예산협의회 구성 및 회의 운영
 - ※ 민관예산협의회 구성 : 6개 분야 X 27명(시민위원 20명, 전문가 3명, 공무원 4명)
- (최종 선정) 시민투표 후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8월)에서 최종 승인



○ 시민의견서 작성분과 운영 : '23. 8월~12월

- 구성 : 시민참여예산위원 50명 ※ 민관예산협의회와 겸직(8월~)
- 역할 : 2024회계연도 市 예산안에 대한 시민의견서 작성 및 시의회 제출

○ 시민참여예산 사업 모니터링 실시 : '23. 7월, 12월

- 2023년 편성 시민참여예산사업의 사업계획, 진행상황, 사업성과 등 점검

② 제도 홍보 및 시민참여역량 강화

○ 시민참여예산 청년 서포터즈 모집·운영 : '23. 4월~8월

- 구성 : 서울시 거주 청년(만 19세~39세) 20명 내외
- 역할 : 제안사업 검토회의 등 시민참여예산 운영과정 지원 및 제도 홍보

○ 예산학교(대면교육) 운영 : '23. 6월~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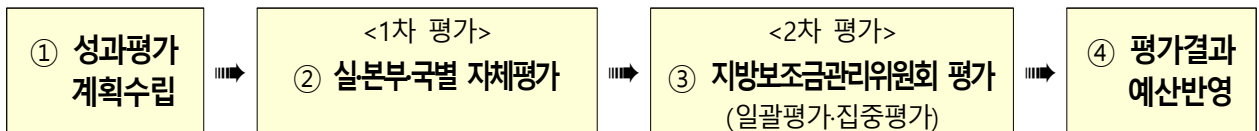
- 찾아가는 예산학교 : 해당 자치구 주민 대상 대면 교육
- 약자동행 예산학교 : 청소년센터, 장애인복지시설 등 이용자 및 종사자 교육

2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를 통한 재정환류 강화

지방보조사업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재정 운영상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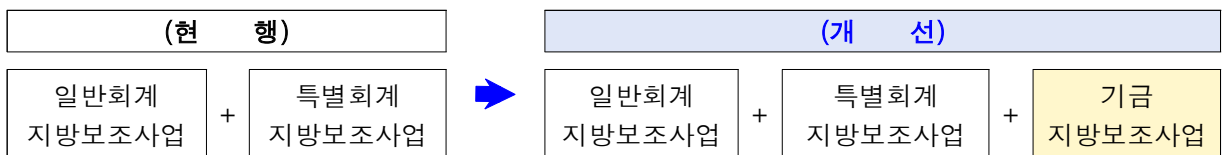
□ 성과평가 개요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 평가대상 : 전년도 추진 지방보조사업(공공단체보조, 민간보조)
 - ※ 국고보조사업, 교육기관보조사업, 예비군육성지원보조사업 등 제외
- 평가절차



□ 성과평가 추진계획

- 1차 평가(부서 자체평가 ⇒ 실·본부·국 평가위 등급조정) : 4~6월
 - (평가대상) '22년도 추진 지방보조사업 807개 2조 4,113억원
 - ※ 기금 편성 지방보조사업도 평가대상에 포함시켜 지방보조사업 관리 강화



- (평가항목) 사업계획(성과목표의 명확성, 추진일정의 구체성 등 15점), 사업관리(사업 주기적 관리 등 25점), 사업성과(성과목표 달성도·시민편익 등 60점)
- (평가방법) ① 평가항목별 점수집계 후 등급별 비율에 따라 등급 부여(미흡사업 20% 이상 의무 배분으로 평가의 관대화 방지)
 - ※ 등급비율(매우우수 10%, 우수 20%, 보통 50%, 미흡 20%)
- ② 사업의 지속·축소·폐지 여부 결정
- (결과활용) 미흡사업은 원칙적으로 '24년 예산 미반영 또는 감액

○ 2차 평가(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평가) : 7월

- (평가대상) 1차 평가 대상사업 전체

- ▶ [집중평가] 3년 초과 계속사업, 자체평가 결과 '미흡' 사업 중 사업부서 지속의견 사업, 자체평가 결과 '보통' 이상 사업 중 부실 우려 사업*, 부적정 집행 관련 보조사업(추가)**

* 평가점수 및 집행을 저조, 반환금 체납, 민원발생 사업 등
 ** 국회·감사원 등 외부기관 감사, 市 자체감사 등에서 부적정 집행이 지적된 사업



- ▶ [일괄평가] 집중평가 대상 외 사업

- (평가주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재정담당관 구성·운영)
- (평가방법) 보조사업(사업유지 필요성 등)에 대한 사업부서 설명 후 질의응답
- (평가내용) 사업의 타당성, 성과의 적정성 등 평가하여 사업의 지속·축소·폐기 여부 결정

○ 보조사업별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 차년도 예산 편성 등 재정 환류 : 8~10월

- '24년 예산편성시 결과 반영(살·본부국, 예산담당관) 및 시 홈페이지에 결과 공개

□ 향후일정

-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계획수립 : '23. 4월
- 1차 평가(실·본부·국별 자체평가) : '23. 4~6월
- 2차 평가(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평가) : '23. 7월
- 평가결과를 반영한 예산 편성 : '23. 8~10월

3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추진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답례품 개발, 다양한 홍보로 기부 활성화 도모

□ 제도개요

- 개인(법인 불가)은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주민 복리증진사업(법 제11조) 등에 활용
- 기부자에게는 답례품 및 세액공제 혜택 제공
 - (답례품) 기부금의 30%(최대 150만원)로 지역 특산품, 상품권 등 구성
 - (세액공제) 기부금 10만원까지 100%, 10만원 초과 시 16.5% 세액공제
 - ※ 연간 1인당 최고 500만원 기부/세액공제 부담(국세90.9%, 지방세9.1%)

□ 추진경과

- (기금사업) 사업 후보군 발굴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자문
 - 실·본부·국 수요조사로 기금사업 후보군을 발굴하고 기존사업과 중복 여부 및 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쳐 4개 사업 선정(2. 8.~2. 20.)

<고향사랑기금 사업 후보군>

- ① 청소년 부모 자립 지원사업 ②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 ③ 자립준비청년 생활안정 지원사업 ④ 약자와 동행하는 농촌힐링 지원사업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고향사랑기금 사업 후보군 검토 및 기금 사업 개발전략에 관한 발제 및 토론(3.20.)
- 기금 사업 후보군 선호도, 고향사랑기부제 인지도 및 기부 의향 조사를 위한 시민 대상 온라인 투표 엠보팅 실시(4.4.~4.28.)

- (답례품 선정) 기부자에게 감사 의미를 전하는 양질의 답례품 선정
 - 대시민 수요조사 등을 기초로 답례품 품목 확정하고 공급업체 공모(1.5.~1.13.)
 - 1~2차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통해 8종의 답례품 선정('22.12.23., '23.1.17.)

<답례품 목록>

- ▲ 서울사랑상품권 ▲ 입장권(시티투어버스, N서울타워, 한강유람선)
- ▲ 농산물(경북공쌀, 황실배) ▲ 서울상징 공예품(경북궁 자경전 꽃담 스킨, 창덕궁 전통물감 채색키트)

- (제도·모금 홍보) **잠재적 기부대상자 상대로 다양한 맞춤형 홍보**
 - 시 보유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물 게시 및 홍보 문구 표출
 - * 市 SNS, 지하철 역사 미디어 보드, 전동차 내부, 시청사 시민 게시판 등
 -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도권 거주자 대상 **광역버스 랩핑 광고**(4. 1.~5. 31.)
 - 타 시·도 **우호교류협약으로** 홍보 협력 강화(경북(1.18), 제주(2.3), 세종(4.10), 대전(4.10.))
 - ※ 市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물 전달(제주(300부), 경북(200부), 상주(50부), 안동(50부))

□ 추진계획

- 시민들의 자발적 기부 촉진을 위한 **의미 있는 기금 사업 개발**
 - 시민 선호도 조사(4.4.~4.28.),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내 확정
- 역사, 문화 등 서울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답례품 추가선정**
 - 기부금 추이 및 기부자들의 답례품 선호도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고향사랑 기부자가 선호하는 답례품 추가 발굴
- 기금 사업의 의미를 부각하여 **기부 동기를 부여하는 홍보 추진**
 - 사업 수혜자의 삶의 질 개선 등을 강조하여 기부자의 공감 유도

※ 예시 : **청소년 부모 자립 지원사업**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에게 자립 지원 촉진수당 지급)
 ⇒“서울에 기부하셔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고딩엄빠의 자립과 성장을 도와주세요”

□ 향후일정

- 답례품 추가 선정(답례품 선정위원회 제3차 회의) : '23.5.4.(목)
-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23. 5월 중

기금 사업 착수 시기 관련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자문 결과(3. 20.)

- 제도 시행 초기이므로 올해는 기부금 모금에 집중하여 기금 재원을 확충
- 기금 사업은 연내 확정하여 사업 중심의 모금 홍보를 진행하고, 내년 초 사업 착수 추진

- 기금운용계획안 시의회 제출 : '23년 1차 추경 시

4. 출자·출연기관 효율화 및 도시경쟁력 제고

①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

② 미래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속가능발전 추진

1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기관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도모

□ 추진근거

-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구성 : 총 13명(내부 3명, 외부 10명 / 위원장 : 행정1부시장)

· 주요기능 : 기관 설립 타당성, 경영실적 평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심의·의결

□ 추진내용

① 제2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개최('23.4월말 예정)

- 통합대상 기관의 세부통합방안에 대한 심의
 - (서울연구원-기술연구원) 직원 대표,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통합 TF에서 융복합 혁신연구조직으로 설계 방안 도출 중
 - (공공보건의료재단-서울의료원) 통합 기본계획 수립(2월)을 완료하였으며, 전문기관 용역 및 통합 TF 통해 조직·인력·보수 등 세부내용 구체화 중
- 자치구 출연기관(관악구 중소벤처진흥원) 설립안 1차 협의
 - 관악구 벤처·창업기업을 위한 기관 설립에 대한 방향 검토 및 사전논의

② 제3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개최('23.6월)

- 우선 자체 혁신방안 수립 기관(50플러스재단·평생교육진흥원)의 혁신방안 심의
 - 기관 자체 혁신방안 마련 및 전문기관 용역을 병행하여 혁신방안 구체화 중
- 위원회 외부위원 임기만료(6.30.)에 따른 신규 위원 구성·위촉

□ 향후일정

-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개최 : '23.4월말 / 6월중
-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 : '23.6월말

2 미래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속가능발전 추진

미래 도시경쟁력을 위해 경제·사회·환경 등 지속가능발전 요소들과 연계된 행정계획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가치 확산

□ 추진방향

- 지속가능발전 확산을 위한 대시민 토론회 개최 및 교육 활동
-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행정계획의 검토·환류 프로세스 구축

□ 추진내용

- 제5기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통한 시정 지속가능성 확보
 -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25년~'44년) 수립을 위한 사전 준비
 - * 제2차 지속가능발전 세부사업, 성과지표 검토 및 '22년도 실적 점검
 - 지속가능발전 토론회를 통해 지속가능성 가치에 대해 대시민 공유
 - * '23. 2. 운영협의회에서 분기별 1회 토론회 개최 결정
- 시정 운영 지속가능성 추구를 위해 중장기 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 검토
 - 행정계획 확정 전 사전 검토를 통해 市 주요계획에 지속가능성 내재화
 - ※ '23년 수립 예정 중장기 행정계획 3개* 검토 완료
 - * 물 재이용 관리계획, 지역사회 보장계획, 자원순환 시행계획
 - 중장기 행정계획 수립 사업부서와 지속적인 소통 통한 환류 효과 제고

□ 향후일정

- 분기별 토론회 개최를 통한 서울시 지속가능성 확산·홍보
 - 지방정부 탄소중립 대응 방안을 주제로 환경분과 토론회 개최 예정(4.21.)
- 제5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및 중장기 행정계획 검토
 - 분과회의 개최, 중장기 행정계획 검토('23년 7개 행정계획 검토 예정)

□ 위원회 개요

- 근거 : 「市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4장(지속가능발전위원회)
- 임기 : 2년 (제5기 : '22. 12월 ~ '24. 12월)
- 주요 기능 : 시정 전반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심의 및 자문
- 위원 구성 :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 포함 총 40명 이내
 - 공동위원장 : 서울특별시장, 위촉위원 중 1명
 - 부위원장 : 위촉위원 중 1명
 - 위촉직위원 : 경제, 사회, 환경, 협력 각 분야별 지속가능발전 전문가 등
 - 당연직위원 : 시장, 기획조정실장, 경제일자리기획관, 복지기획관, 환경기획관
- 회의 주기 : 전체 회의(반기별), 운영협의회(분기별), 분과위원회(수시)

□ 지속가능발전 확산

- 분기별 각 분과(환경·경제·사회·협력)토론회 개최, 대시민 교육과정 개설 등을 통한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가치 확산·홍보

<지속가능발전 환경분과 대시민 토론회 개요>

- 주 제 : 기후위기 시대의 지방정부 탄소중립 대응 정책 방안
 - ※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와 연계하여 진행
- 장 소 : 한국행정연구원(서울시 은평구)
- 일 시 : 2023. 4. 21.(화) 14:00 ~ 15:30
- 발제자 및 토론자
 - 좌 장 : 김태영(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발제자 : 유정민(서울연구원), 임현우(건국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토론자 : 송지현(세종대학교 교수), 정원희(건양대학교 교수)
 - 유종익(한국기후변화연구원), 김성훈(한국에너지공단)